

## ‘오늘부터 교실 마스크 해제’ 학생·학부모·교사 기대 반 우려 반

“얼굴 잘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까워...친구들과 소통 기대”

“코로나19 미감염 학생들 확진·교실내 집단감염 우려도”

30일부터 교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가운데 학부모와 학생·교사들은 반기는 분위기 속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학교·학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함에 따라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교실 등에서 착용 여부가 결정된다.

교실 마스크 의무 착용이 4년 만에 해제되면서 학부모를 비롯해 교사·학생들은 반기는 분위기이다.

초등 예비 4학년 학부모 A(45)씨는 “올해 6학년이 되는 형은 소풍·체육대회·모듬 활동 등을 통해 친구들과 많이 어울렸는데 둘째는 입학 때부터 3학년까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친구 얼굴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까워

다”며 “남은 초등 3년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학교에 입학하는 B(13)양은 “마스크를 쓴 채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면 알아듣지 못해 답답했다”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면 벗고 생활하겠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고교 신입생 C(16)군은 “중학교 3년동안 마스크를 쓰고 학교 생활을 해 친구들의 얼굴을 잘 모른다”며 “고등학교에서는 친구들과 마주 보며 소통하고 싶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 D씨는 “학부모를 비롯해 교사, 학생 대부분은 교실 등에서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고 싶어 했다”며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

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2019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약간 낯설겠지만 금방 적응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마스크 해제를 반기는 분위기 속에서 감염자 폭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 광주지역 코로나19 학생 감염자는 지난 25일 8명, 26일 9명, 27일 6명 등 지난 2020년부터 이날까지 11만767명으로 집계됐다. 총 학생수 19만1689명의 57.7%이다.

광주 교육단체 관계자는 “마스크 의무착용을 해제 할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학생들이 확진될 확률이 높아지고 교실내 집단 감염도 우려된다”며 “개학까지 많은 시간이 남

아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책을 먼저 마련한 뒤 학교는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중학교 교사는 “학생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태에서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 인 것 같다”며 “방학이라는 시간을 활용해 충분히 논의한 뒤 결정을 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실내 마스크 해제일에 등교를 하는 학교는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0개교이다. 초등학교 145개교에서 4200여 명의 학생이 돌봄 교실을 이용하고 있다.

김재환기자

### 영암군 고유지명 ‘마한면 개명’ 추진에 나주시 “고대 마한 지명은 독점 안돼”

영암군이 고대국가 ‘마한(馬韓) 고유지명을 독점한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추진하면서 복수의 지자체와 갈등을 양산할 것으로 우려된다.

29일 나주문화원에 따르면, 영암군이 고대 고분과 마한문화공원이 소재한 시종면의 명칭을 ‘마한면’으로 변경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영암 시종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나주 반남면 주민과 나주문화원은 ‘반대 서명운동’을 예고하고 있다.

반남면 주민들은 나주시에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전남도지명위원회를 통해 영암군이 마한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주 반남면은 다수의 마한고분군이 산재해 있고, 마한시대 유물을 전시하는 전남 유일의 국립나주박물관이 위치한 마한역사의 중심지로 평가 받고 있다.

나주문화원 관계자는 “고대 마한의 공간 범위가 호남을 중심으로 경기·충청 등 한반도 중서부지역·서남부지역까지 포괄하고 있어서 영암 시종면만을 대표하는 지명으로 볼 수 없다”며 “시종면을 마한면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명칭 변경을 강

행할 경우 지자체 간 갈등 확산으로 전남도가 지난해 말 어렵게 국비 확보를 통해 추진 예정인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역사문화권 종합 정비사업’ 진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방행정구역 명칭을 바꿀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로 의결하고 상위 단체인(전남도)에 보고 후 ‘도 지명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자치부령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에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 기준을 네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역사적 전통과 문화의 계승 등으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둘째 ‘현행 명칭의 어감이 심히 좋지 아니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셋째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현행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넷째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명칭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이다.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도지공부까지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변경 승인은 어려운 것으로 전해진다.

나주=송준표기자



‘봄꽃의 향연’ 전국을 공공 열린 추위가 한풀 꺾인 29일 오후 제주시 한림공원에 흥매화와 수선화가 피어나 시나브로 찾아오는 봄기운을 느끼게 한다.

### 최강 한파 속 광주시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광주시가 한파 속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광주시는 최근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0~5세 양육 가정 등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6만7641가구에 총 341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시는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기존 사업(6개 사업 110억 원)에 더해 231억 원(국비57억 원·시비174억 원)을 추가 확보, 7개 사업을 신설·확대 추진한다.

우선 에너지마우저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일반가구와 차상위 계층 등 3만7636가구에 75억 원(가구

당 20만원)을 투입한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0~5세 영유아 양육 가구 4만6223가구에 93억 원(가구당 20만 원)을 지원,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장기요양기관 260곳을 대상으로 난방비 40만 원을 특별지원한다.

정승호기자

**GURYE**

지리산의 넉넉함을 담은 인정 가득한 곳

매실 산수유 오이 감